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국민통합 · 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음
-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I

개 요

□ 총 836,687명 대상 특별사면 등 시행

- ‘국민주권정부’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025. 8. 15.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 하였음

순번	사면 유형				인원	
1	일반 형사범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23	명
			잔형 감형		51	명
		가석방자	잔형 집행면제		244	명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형선고실효 및 복권		1,596	명
			형선고실효		6	명
		소계				1,920
2	특별배려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5	명
			잔형 감형		5	명
3	노역장 유치자		잔형 집행면제		24	명
4	경제인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1	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3	명
			복권		12	명
5	고위공직자 등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6	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8	명
			복권		13	명
6	노조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4	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124	명
			복권		47	명
7	기타		형선고실효 및 복권		6	명
			복권		8	명
8	국방부 소관 前 군안군무원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형선고실효 및 복권	2	명	
9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7	명
10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094	명
11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3,497	명
12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	명
합계					836,687	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약 324만	명

II

이번 사면의 특징

1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

-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하였음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면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 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면

-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되어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

4**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면**

-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

5**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가.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나.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도모

다.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 조성

라.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면의 주요내용

1

일반 형사범 : 1,922명

※ 국방부 소관 2명 포함

○ 수형자·가석방자 : 318명

-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604명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았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2

특별배려 수형자 : 10명

○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 잔형집행면제·감형

○ 유아 대동 수형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아 대동자가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함

【참고 사례 : A○○ (여, 34세), 잔형집행 면제(약 2월)】

- ▶ 차량에서 지갑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되어 수형 중
- ▶ 현재 생후 6개월 된 아들('25. 3.생)을 교도소에서 양육하고 있음

○ 생계형 절도 사범

- 극심한 생활고로 식료품 등 소액의 생필품을 절취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인 모범 수형자

※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지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과 연계 예정

【참고 사례 : B○○ (여, 67세), 특별감형(약 2월)】

- ▶ 마트에서 합계 11만 원 상당의 양말, 닭강정, 고기 등의 식료품을 훔친 사실로 징역 1년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을 59%)
- ▶ 자백, 반성, 피해금액 경미, 피해품 반환

○ 고령자

- 70세 이상의 고령인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3

노역장 유치자 : 24명

-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하여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
- 경제적 사정으로 노역장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완화

【참고 사례 : C○○(남, 51세), 잔형집행 면제(8일)】

- ▶ 인천 서구 '공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함

-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
- 주요 사면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복권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5

경제인 : 16명

-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
- 주요 사면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복권	최지성(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前 대구은행장)

6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 42명

-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 선별하였음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 운영하다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사안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수형자로 엄선
- ⇒ 잔형 집행면제 35명 / 잔형 감형 7명

【참고 사례 : D○○ (남, 43세), 잔형집행 면제(약 1월)】

- ▶ 인테리어업(소상공인)
- ▶ 4대 보험료 체납 등 다액의 채무부담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1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차용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 중

7

노조원·노점상·농민 : 184명

-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 집단별 분류

노조원	잔형 집행면제, 형선고실효, 복권	1 명
	잔형집행면제, 복권	3 명
	형선고실효, 복권	124 명
	복권	47 명
노점상	형선고실효, 복권	1 명
	복권	5 명
농민	형선고실효, 복권	3 명
합 계		184 명

8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 440명

-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440명

9

청년(19세~34세) : 249명

-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

⇒ 잔형 집행면제·감형 : 37명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212명

10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7명

- (대상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자

- (제외)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과 뇌물수수, ▲담합행위,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11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094명

- (대상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위생·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의 과태료·시정명령 처분 등을 받은 자

- ▶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만 해당

- (제외) 위생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반행위와 반복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12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01명

-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 삭제로 행정제재 감면
- ※ 다만, 어업허가제한, 조업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보호를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행위 경각심 제고

13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23,497명

-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호구역 內 위반 행위 등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6,638명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집행면제	3,624명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3,235명

14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 약 324만 명

-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5. 9. 30.(잠정) 시행할 예정임
- '20. 1. 1.부터 '25. 6. 30.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
- ※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25. 12. 31.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총괄)	특별사면·감형·복권	과 장 김태형	(02-2110-3269)
		검 사 곽중욱	
법무부 공공형사과	특별사면·감형·복권	과 장 이병주	(02-2110-3280)
		검 사 이웅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정영길	(044-202-6427)
		사무관 박병규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특별사면·감형·복권	담당관 권도형	(02-748-6839)
		법무관 김다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연안어업 면허·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김태경	(044-200-5563)
		사무관 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최종동	(043-719-2032)
		연구관 홍정미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조우종	(02-3150-2253)
		경 정 김동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과 장 서나윤	(02-2100-2623)
		사무관 신용진	